

선거명	제19대 국회의원선거		선거구명	인천광역시 부평구을	
후보자명	홍영표	기호		소속정당명	민주통합당
공약번호: 1	공약 제목 : 재벌개혁 및 슈퍼부자 증세를 통한 경제민주화 추진				
<p>▶ MB정부가 폐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및 순환출자 금지</p> <p>→ ‘공정거래법’ 개정으로 적용범위 확대 및 출자총액한도 하향 조정(40%→25%) 통한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완화</p> <p>→ ‘공정거래법’ 개정으로 신규 순환출자 금지 및 기존 순환출자는 일정 기간 내 해소토록 함 (미 해소시 의결권 제한)</p> <p>▶ 대기업의 ‘부당내부거래’에 대한 규제 강화</p> <p>→ ‘공정거래법’ 개정으로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금지, 실태조사 공표 의무화,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명문화 (20개 대기업 매출액(12.9조원)의 71%(9.2조원)가 계열사간 내부거래)</p> <p>▶ 1% 슈퍼부자 증세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 및 소득재분배 기능 회복</p> <p>→ ‘소득세법’ 개정으로 소득세 최고과표 구간을 ‘3억원 초과’에서 ‘1억5천만원 초과’로 낮추고 38%의 최고세율 적용</p> <p>→ ‘법인세법’ 개정으로 법인세 ‘500억원 초과’ 과표구간 신설하여 25% 최고세율 적용하고, ‘2억원~500억원’ 구간에 22% 세율 적용</p>					
공약번호: 2	공약 제목 : 준공업지역 집약화, 주거지역 재생 등을 통한 ‘활력 부평’				
<p>▶ 부평미군기지 이전부지 조기 활용 추진</p> <p>→ 국가공원사업화 추진 및 철저한 환경오염 조사·환경치유 완료</p> <p>→ DRMO(군수품재활용사무소) 부지 조기활용 및 미군부대 통과도로 개설(장고개길: 주안장로교회~한신희APT 포함, 479억원, 2017년 완공예정)</p> <p>▶ 7호선 추가연장구간(부평구청~마장사거리~석남동) 조기개통 추진</p> <p>→ 차질없는 국·시비(4,322억원) 확보(2018년 완공 예정)</p> <p>→ 산곡·청천동 준공업지역의 일반용지 전환으로 역세권개발</p> <p>→ 청천동 157야공대대 이전 추진</p> <p>▶ 주민주도형 도시 및 주거정비사업 신속 추진</p> <p>→ 주민들의 동의하는 재개발·재건축 사업의 주변 기반시설에 대한 국·시비 지원 확대</p>					

및 신속한 행정·재정 지원

- ▶ 서부간선수로 친수생태공간 조성 및 주변 도로정비 추진
  - 2012년말 사업완료를 위한 미확보 재원 32억6천만원 적기 확보
  - 기존 도시계획시설(도로) 폐지 후 청천로~아나지로 도로정비 추진
- ▶ 굴포천을 수질오염·악취가 없는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유지·관리
  - 수질오염·악취문제가 심각한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도록 추진
  - 하천 유지관리비용 국고지원 확충으로 관거 신·증설 등 수질오염총량관리 목표 달성
- ▶ 안전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
  - 청천동 세월천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완료
  - 삼산동~부천시 경계 인천상징 조형물 설치 및 야간경관 조명 설치, 가로환경정비 등 추진
- ▶ 산곡동 미산초 옆 교육청 유희부지 (수영장 등 체육·교육)시설 건립추진
  - 용역결과에 따른 시설물 결정 후 국·시비, 교과부·교육청 등 예산확보
- ▶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추진
  - ‘유료도로법’ 개정으로 통합채산제 적용대상 배제
  - 폐지 전 보완적으로 통행료 감면 및 탄력적용 추진
- ▶ 부평구의 열악한 재정문제 개선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
  - ‘지방교부세법’ 개정으로 광역시 자치구도 보통교부세 교부대상으로 전환
  -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균형수요 보정 반영비율 개선

공약번호: 3

공약 제목 :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

- ▶ 기초노령연금 급여 수준 및 대상자 확대 및 전액 국비 지원
  - 현행 9만원의 급여수준을 매년 1%씩 인상 추진
  - 현행 수혜대상 70%를 ‘14년까지 80%로 확대
  - 기초노령연금 지방비 일부 부담 예산을 전액 국고지원 추진
- ▶ 어르신 일자리창출 및 경로당 운영지원 확대
  - 공공분야 및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등 민간분야 일자리 지속적 확대

<p>→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지속적 확대 ('12년 월평균 22만원)</p> <p>▶ 비정규직 차별 단계적 철폐 및 정규직 전환사업 지원</p> <p>→ 심화되는 월평균 임금 격차 완화(정규직 272만원 vs.비정규직 130만원)</p> <p>→ 사회보험 가입률 확대(정규직 83~99% vs. 비정규직 32~37%)</p> <p>→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부지원 확대로 고용안정화 촉진</p> <p>▶ 저소득·소외계층에 대한 주택·주거환경 개선사업 확대</p> <p>→ 독거노인·장애인·한부모가정 등 대상으로 도배·장판교체, 지붕·화장실 수리 제공</p> <p>▶ 부평구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따른 실질적 국가 지원 확보</p> <p>→ 양성평등정책, 일·가정 양립 지원정책 등 추진에 따른 중앙정부 및 인천시의 재정 지원 확보</p>	
공약번호: 4	공약 제목 : 보편적 복지 확충으로 보육·교육 부담 완화
<p>▶ 모든 0~5세 아동의 어린이집·유치원 보육비용 전액 지원으로 무상보육 실현</p> <p>→ 현행 정부지원단가 기준에서 표준보육비용 기준으로 확대하여 이용자의 육아비용 부담 경감, 서비스 질 개선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추진</p> <p>▶ 국고지원 통한 초등학교·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</p> <p>→ 현재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이 분담하고 있는 무상급식 비용을 중앙정부가 50% 지원하도록 명문화 및 예산확보 추진</p> <p>→ 지역사회 연계형 친환경 식재료 지원 확대</p> <p>▶ 대학교 반값등록금 실현 추진</p> <p>→ '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' 제정으로 내국세 8% 정도 수준의 교부금 재원 마련하여 등록금 수준을 50%까지 하향조정</p> <p>▶ 공교육 국가지원 강화로 사교육 의존도 완화</p> <p>→ GDP 대비 7% 수준의 교육재정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 예산 확보</p>	
공약번호: 5	공약 제목 : 중소기업·소상공인 지원으로 서민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
<p>▶ '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' 강화로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·중소상인 보호</p> <p>→ 대기업의 진입규제 장벽 강화(유통업, 식자재 납품업, 요식업, 약국, 안경점,</p>	

이·미용업, 제과점 등)

→ ‘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’ 개정으로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제한 위반시 경영진 혹은 지배주주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

→ 사업조정 조치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이양 강제화(위반시 과태료부과)

▶ 대형마트·SSM 영업 일수·시간제한 확대로 골목상권 보호

→ ‘유통산업법’ 개정으로 대형마트·SSM의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 확대

▶ 카드 수수료 인하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

→ 중소가맹점 수수료(연매출 2억원 미만, 1.8%) 인하 및 요식업 등 서민업종 수수료 인하 추진

▶ 한국GM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지원

→ 산업은행을 통한 지속적 R&D 확보 등 생산기지 유지를 위한 견제 강화

→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자동차산업을 인천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지원

▶ 부평산단 구조고도화 추진 및 지원시설 강화

→ 구조고도화 세부계획 수립 용역 착수

→ 산단 활성화를 위한 도로 정비 등 주변 환경개선 추진

→ ‘인천전직지원센터’ 설치로 재취업·창업 등 원활한 경력전환 유도

→ 공공 어린이집 설치 등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

▶ 노후된 청천농장의 시급한 정비사업(2,841억원) 추진

→ 아파트형공장으로 재건축 유도, 인근 노후주거지와 병행정비, 근로자 생활복지기반 공급 등